

신축년 키워드 #회복 #통합 #도약 “우보천리, 선도국가 향해 나가자”

文 대통령, 온라인 신년인사회

일반국민 총 8명 특별초청
“새해, 회복의 해... 코로나 극복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회복·통합·도약'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며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렇게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나은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재계, 각계각층의 국민 등 50여명과 함께 온라인으로 신년인사회를 했다. 사상 최초로 화상 연결을 통해 치른 신년인사회는 문 대통령의 신년 인사, 5부 요인과 정·재계 인사의 신년 덕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주요 정당 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다.

특별초청된 일반 국민은 모두 8명으로 구창식 (주)바로바로산업개발 대표, 김병근 평택박애병원장, 박용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 이승우 119레오 대표, 김남경 단하주만 대표, 광주광산경찰서 '우리 동네 시민경찰' 김래준 씨, 김동환 경위, 배우 겸 유튜버인 한소영 씨 등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인사를 통해 “새해는 '회복의 해'다.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2월부터 코로나19 백

신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새해는 '통합의 해'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신축년 새해를 '도약의 해'로도 규정 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며 ‘K-방역, 세계 최고의 디지털기술, 빠른 경제 회복, 뛰어난 문화 역량, 발전된 민주주의 속의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국민 역량”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세계에서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고, '2050 탄소중립' 정책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카톡방에 공문... '보안승승' 軍 오픈카톡방

소령급 지휘관, 직접 단톡방 개설

일선 부대들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오픈카톡방과 밴드 등에서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의 군간부는 7일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사병들의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과 사병 부모들에게 열린 부대운영을 보여주기 위해 개설된 오픈카톡방과 밴드 등이 보안취약성을 안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간부는 “병력운용의 투명성, 열린 소통 등의 취지는 좋지만 단체톡방 개설로 인한 과도한 메세지들이 업무에 발목을 잡는다”면서 “차치, 이러한 단체톡방을 통해 보안 사안이 누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에펠포리아(fmkorea)', '페이스북'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반] 대외비부대 오픈카톡방 참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의 원작성자는 지난해 12월 28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군부대 오픈카톡방이 암호도 없이 익명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돼 보안의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게시물은 소령급 지휘관인 사격대장이 직접 개설한 단톡방으로, 사격대장은 고도의 비닉(국가안보상 국

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무기)과 보안이 요구되는 장비를 운용하는 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점에서 군 당국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게시물에 올라온 오픈단톡방 캡처 사진을 보면, 사격대 소속 인사과장은 병을 대상으로 하는 공문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시인했다.

게시물 원작성자가 “대외비부대에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관리하면 감찰 지적사항이 된다”고 언급하자 오픈카톡방 참가자들이 빠져나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에 사격대장은 “외부유출 목적이 아닌 인원을 관리차원의 방이 개설됐다”면서 게시물의 신원을 물었고, 이에 게시물 원작성자는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게시물 원작성자가 “폐쇄하도록”이라고 말하자 사격대장은 “모든이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저와 같이 나가면 폐쇄(폐쇄의 오기-3회 반복사용)되겠습니다”며 즉각적인 오픈카톡방 조치를 미루는 모습도 목격됐다.

현재 해당 오픈카톡과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일부 군부대의 오픈카톡방은 폐쇄되거나 채팅이 불가능한 일부 카카오톡 채널만 공개된 상태.

/문형철 기자 captinn@

매출감소 택시법인가사에 50만원 지급

고용부, 약 8만명 대상 2차 지원금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가사에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작년 10월에 실시한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이은 2차 지원으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작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2021년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

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정부는 지난 1차 지원 당시 매출액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경우 계속 근무 여부만 검토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운전자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신청서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번 2차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 1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공고(1월 8일 예정)를 통해 안내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정의당, 이낙연 대표에 호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대표에게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탄소중립 표준화 예산 1625억 '역대최대'

산업부 '4대 시그니처정책' 추진
올 예산 전년대비 20% 증액 투입
그린테크 기술 활용 표준개발 나서

정부가 탄소중립 표준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유통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4대 시그니처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2021년 표준연구개발에 전년 대비 20.0% 증가한 16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표준 분야 시그니처 정책으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리가 보유한 배터리·수

소 분야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은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2021~2025)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표준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보다 30% 증액된 622억원을 투입, 역대 최대 규모의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미국과 첨단산업이나 탄소중립 분야를, 독일과는 스마트기술, 미래차 분야 등 저

탄소 산업·기술 강국과의 표준협력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선 비대면 중심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나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실내헬스기구, 바닥재, 발욕조, 전기마사지기, 완구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광과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몰 사업자에게 리콜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디지털일자리 청년 고용기업 인건비 지원

고용부, 최대 190만원 6개월간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기술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채용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과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며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하다. 대상 기업이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

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등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과 4대 보험 가입 등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월급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임금이 200만원 미만이면 간접노무비 10만원과 지급 임금의 90%를 인건비로 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세종=한용수 기자